

# ‘6년째 재판 중’...형사사건 피해자 “이게 재판입니까”

### 2014년 8월26일 첫 재판...선고 ‘차일피일’

### 일부 사건 당사자, ‘극도의 피로감’ 호소

“6년째 재판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6년째 이어지는 형사재판에 일부 사건 당사자들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광주지법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10명(법인 포함)에 대한 재판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광고대행업체를 차려 놓고 2008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텔레마케터 20여명을 고용한 뒤 전국의 자영업자 3만7000여

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인 3만3000~30만원을 받는 등 10만여회에 걸쳐 9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4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KT를 사칭, 자영업자들에게 전화한 뒤 인터넷 등에 광고를 내주겠다고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게 당시 경찰의 설명이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이전 결계 사실을 잊어버릴 만한 3·4개월 주기로 다시 전화해 아직 광고비가 결제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반복 결계를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경찰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실제 대형 통신업체의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기도 했다. 영업방식의 문제일뿐 사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2014년 8월26일 열렸다.

이후 수십 차례 재판이 이어졌다.

그동안 검사가 신청한 증인만 160여명에 이르렀다.

재판장은 이 중 50여명만 법정으로 불렀다.

그 사이 인사 등을 이유로 10명에 가까운 검사가 교체됐다.

재판장 또한 여러 명이 거쳐 갔다.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재판은 올해 2월6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당일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달 20일로 선고가 연기됐다가 결국에는 변론이 재개됐다.

지난 6월23일·7월9일·8월20일로 선고기일이 다시 지정됐지만, 이 역시 모두 연기됐다.

차기 선고 지정일은 오는 9월24일이다.

6년째 재판이 이어지는 이유는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송치에서 검사 기소 단계까지 피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이를 법정에서 입증하

려다 보니 세월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매년 초 법원의 정기인사도 한 몫 거들었다.

바뀐 재판장이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다가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목소리다.

오랜 시간이 지나 일부 자료가 없어진 점, 진술 반복, 치열한 쟁점 대립도 재판 장기화에 영향을 미쳤다.

장기간 재판이 계속되면서 일부 사건 당사자들은 진이 빠지다시피 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힌 B씨는 “국가적 주요 사건도 6년이 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너무나 무한하다. 과연 재판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정신적으로 힘들

다. 조속히 판결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광주법원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으로 알고 있다.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6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판을 반복하고만 있는 것은 자칫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례적 경우다. 재판의 장기화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등 법정 인박 관계인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맡고 있다.

정승호 기자



### ‘내일부터 랜선으로 만나요’

수도권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화랑초등학교에서 우명원 교장 선생님이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유치원과 학교에 대해 26일부터 9월11일까지 약 3주간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을 발표했다.

수도권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화랑초등학교에서 우명원 교장 선생님이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유치원과 학교에 대해 26일부터 9월11일까지 약 3주간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을 발표했다.

### ‘별실 마련’ 외국여성 고용해 영업을 술집 적발

### ‘바(BAR)’ 형태의 술집

광주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흥업소에 집합 금지와 시설 폐쇄 행정 명령을 내린 가운데, 지역 모 술집이 유흥집객원을 고용해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께 북구 용봉동 ‘바(BAR)’ 형태의 한 술집에서 행정 명령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술집이 일종의 비밀 통로와 별실을 마련, 외국인 여성 집객원 3명을 고용해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 술집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집합 금지와 시설 폐쇄 대상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술집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구청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유흥주점 시설 폐쇄에

따른 다양한 변종 영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12일 상무지구 유흥주점발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이날까지 모두 6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흥업소 682곳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집합 금지와 시설 폐쇄 행정 명령을 내렸다.

기동취재본부

### 공기업노조 ‘혁신도시 시즌2’ 광주·전남도 비판

### “혁신도시 현안부터 해결 후 2차 공공기관 유치해야”



광주전남 공동(나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인 광전노협은 18일 기관별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광주·전남으로 오고 싶은 곳이 있겠나”

광주전남공동(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가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추가 유치에 나선 광주·전남도를 짜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광전노협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전남도는 빛가람혁신도시 내 산적한 현안 문제부터 해결한 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광주·전남도가 1차 이전에 따른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 없이 또 다시 공공기관 2차

유치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광전노협은 “두 광역자치체가 1차 이전 당시의 상생 정신을 외면하고 각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광주·전남의 상생과 발전, 그리고 1차 이전 당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협력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전남도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이전 기관 직원들의 삶을 살피는 것 보다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세수와 기업 유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전노협은 “혁신도시에 공공

기관이 이전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전남도에선 지사를 비롯해서 누구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만난 적도 없고 광주·전남도 전임 시장 재임 시절을 제외하면 전혀 교류가 없었다”며 두 광역자치체에 대해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광전노협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기존의 클러스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전기금 출연 문제로 걸돌고 있는 혁신도시 발전재단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광전노협은 “공공기관이 낸 세금으로 조성한 발전기금을 공평하게 출연해 광주·전남도·혁신도시 모두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상생을 통해 양 자치단체 간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빛가람 혁신도시의 이전 기관 종사자는 물론 수도권에서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관의 종사자들이 많은 동요를 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12개 대상 기관 또는 수도권 소재 300여 공공기관 중 광주·전남으로 이전하고 싶은 곳이 얼마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062)943-0135 ~ 6  
FAX: 062)943-0134